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02 / Feb. 2017

02

특별 기획

2016 회계년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재정 논단

2017년도 재정 현안과 과제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단계 재정 개혁을 위한 제언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현안 분석

주요국 지출심사(Spending Review)

운용 구조

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작 : START



Global Finance Platform Builder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 04** **권두언** Opening Address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 08** **재정 논란** Opinion
2017년도 재정 현안과 과제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
2단계 재정 개혁을 위한 제언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전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 20** **특별 기획** Budget direction
2016 회계년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장
2016 회계년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Q&A
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 30** **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
세계잉여금 / 총수입 / 총지출
김도일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원
- 36** **현안 분석** Analysis
주요국 지출심사(Spending Review) 운용 구조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 46** **동향과 소식** Trends / News
국내외 재정 동향
- 54**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PFIS News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운전을 하다 보면 뒤유리창에 ‘3시간째 직진 중’이라고 써 붙인 초보 운전 차량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위 운전자는 “나도 그랬었지”하는 생각에 웃으며, 끼어들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달 넘게 직진 중’입니다. “공약은 그저 공약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은 진작에 빗나갔고, “기존 글로벌 질서가 있으니 그래도 필요에 따라 유턴이나 좌(우)회전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무너졌습니다. 초보 운전자처럼 좌우를 살필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는 곳이 길”이라며, 아예 새로운 길을 내는 모습입니다. 판을 깨고 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계획한 일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선언, 환태평양 경제동반협정(TPP) 탈퇴, 반이민 행정 서명, 중국과 일본 등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한 통상 압력, 국경 장벽 건설 행정명령, 자국 내 기업 유치를 통한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재편 등 다양합니다. 하나하나가 전례 없는 대형 이슈입니다. 국제사회는 불안해하며 경계의 눈빛으로 주시하지만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 모든 것이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입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근본적 이기까지 한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우리 경제의 전열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트럼프즘’(Trumpism, 트럼프의 극단적 주장에 대중이 열광하는 현상)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모든 가치의 최우선순위로 하는 ‘초강경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입니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 부양을 위해 1조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재정 확장과 감세를 추구합니다. 저금리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지출 증가를 통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점에서 ‘트럼프판 신뉴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신고립주의 색채가 강합니다.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군사동맹, 자유무역,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개입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트럼프는 실리주의, 보호무역주의, 중상주의, 민족주의를 특징으로 합니다.

경제 부문에서 그는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3~4%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3.5%로 상승할 경우 향후 10년간 25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게 되면 재정지출 확대, 감세,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 경우

경기회복과 인플레이 압력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향후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노믹스’가 본격화하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전 세계적인 자본 이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를 자극하고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노믹스는 우리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파급 경로는 금리, 통상, 환율 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는 따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가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되면, 13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통상 환경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평평한 운동장론’으로 중국과 환율 논쟁을 벌이는 등 양국 간 통상 전쟁이 본격화했습니다. 미·중 간 경제 갈등으로 위안화 변동성이 커지면 중국 경제 의존율이 높은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환율 조작국 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미 흑자를 보는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고, 한미 FTA를 ‘일자리 킬러’라고 언급한 것도 통상 리스크를 키웁니다.

이런 트럼프노믹스의 영향 이외에도 브렉시트 이후의 넥스트 엑시트(Next Exit) 우려, 2년 연속 2% 성장에 머무는 등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조짐, 인구구조 변화와 내수 둔화, 북핵과 사드 갈등 등 컨트리 리스크의 부각, 4차 산업혁명의 거침없는 기세, 불확실한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말 그대로 첩첩산중입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재정 정책이 주목받는 데다, 기업 구조 조정이나 성장 동력 확충은 지난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재정 확대 목소리가 점점 힘을 받는 형국입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그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똑바로 진단하고, 갈 길과 할 일을 정교하게 처방함으로써, 정책 공간을 넓히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런 흐름과 논의를 감안해 「나라재정」 2월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시각을 담았습니다. 재정 개혁을 위한 과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지출 효율화 분석, 지난해 나라 살림 분석 등입니다. 월간 「나라재정」은 앞으로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재정의 경기 대응력 향상, 재정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광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17년 2월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이원식

재정 논단 Opinion



재정 논단은 전문 정보와 정책 진단 및 제언 등
재정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재정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공간입니다.

2017년도 재정 현안과 과제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

2단계 재정 개혁을 위한 제언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전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khcoo@assembly.go.kr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

2017년도 재정 현안과 과제

경기 대응 차원의 확장적 재정 운용 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성장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저성장세는 올해도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올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영국과 EU 사이의 브렉시트 협상 본격화,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가계 부채 문제, 조선·해운업 구조 조정, 소득 양극화, 청년 실업률 등 해결하기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산재해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금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7%보다도 낮은 2.5%(한국은행)~2.6%(정부)로 전망하고 있고, 민간 전문 기관의 경우 2% 초반의 전망이 다수이며, 심지어 1%대를 전망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작년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올해 두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더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경기 부양을 위한 두 가지 거시 정책 수단 중 하나인 통화정책은 발이 묶인 상태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자니 어려운 경제 상황과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금리를 낮추자니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시장의 반응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금융통화위원회는 최대한 오랫동안 현행 기준 금리를 유지하다가 미국을 따라 인상하는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사실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재정이라 할 수 있으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다. 그런데 2017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400.5조원으로 작년 추경예산 398.5조원 대비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해 과연 우리 재정이 적극적·확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재진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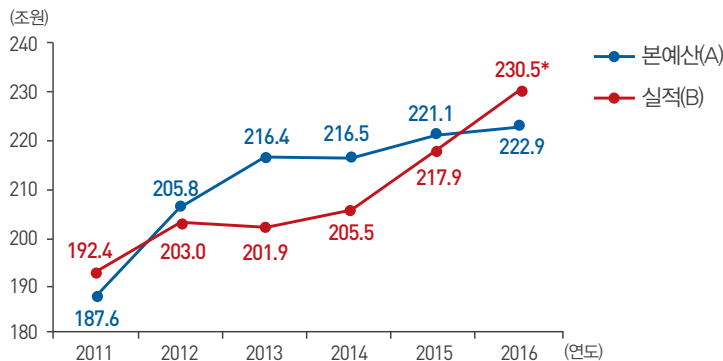
정확한 세수 추계에 근거한 확장적 재정 정책 구사해야

2017년 1월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2016년 11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230.5조원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의 세입 전망 222.9조원 수준을 훌쩍 뛰어 넘었고, 추경예산 편성 때의 세입 전망 232.7조원에도 거의 근접해 있다. 따라서 전년도 12월 세입의 거의 대부분이 초과 세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또한 금년 국세 수입 역시 작년 실적으로부터 베이스업(base-up)될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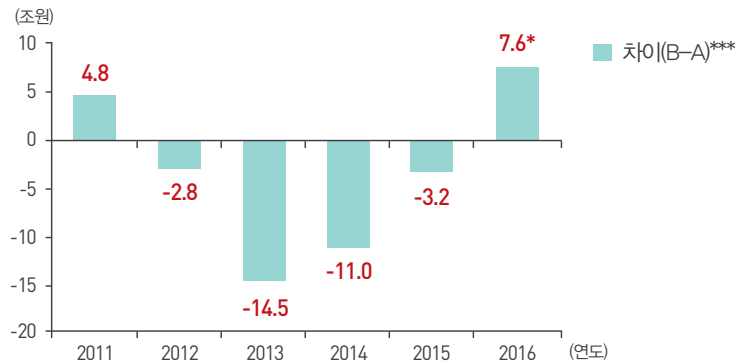
세입 여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무작정 좋아할 일은 아니다. 세입으로 세출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세수 예측은 큰 문제이다. 세입을 과다 추계하면 계획된 지출에 차질을 발생함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세입을 과소 추계하면 지출 계획 자체를 축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런데 최근 국세 수입 예산과 결산을 대비해 보면 지나치게 큰 폭의 세수 결손과 세수 초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부정확한 추계가 세입 부족을 키웠고, 그 반작용으로 2016년부터 세수 추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한 것이 초과 세수를 만들어 내고 있다. 100% 정확한 세수 추계는 불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지출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지난해 세수는 약 10조 원 정도 초과 세수가 전망되고, 금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세수 호조세를 적극 활용하여 확정된 예산보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지출 뒷받침해야

〈그림 1〉 국세 수입 본예산, 실적 추이



〈그림 2〉 세수 결손 및 초과 세수** 추이



* 2016년 실적치는 2016년 11월 말 기준 국세 수입 누계치

**세수 결손 및 초과세수 = 국세 수입 실적치 - 본예산

*** 9쪽 〈그림 1〉 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의 적극적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

적극적 창업 정책으로 청년 실업 해결

경기 부진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거시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에 더해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더 많은 재정적 역할이 요구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실업 문제다. 특히 작년도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청년 10명 중 1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까지 합하면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3배에 달한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공공 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확대를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처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것인 만큼 기업 활력 제고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이 활발하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더하여 청년들이 시장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다리게 하기보다 청년들 스스로 끊임없는 도전과 적극적인 창업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창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민간의 역할이다. 정부는 민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 펀드 조성액이 3.2조 원, 벤처 투자액은 2.1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금년에도 창업 기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어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다. 다만, 재정은 실패를 용인하는 적극적 자세로 비록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패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설계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청년 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해야

경기가 어려울수록 취약 계층이 느끼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금년도 재정은 경기 보강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소득 불평등을 확대해 사회 안전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내수 위축을 심화시켜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다만, 취약 계층 지원에 있어서도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방식의 재정 지원은 지양하고, 근로를 통한 지속 가능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하나로 금년도 재정 등 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를 축소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시장 문제가 그렇지만, 특히나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업자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등 상대적으로 과보호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와 함께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 체계를 도입·확산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현장에서는 엄격한 근로관계법 적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하게 피해보는 사례를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축소

중소·중견 기업의 미래 산업, 4차 산업혁명 분야 투자 자원 확대 필요

재정 운영의 방향은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새로운 기술을 먼저 창조하고, 새로운 시장을 먼저 열어 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장기적 안목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기업이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제약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으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경기를 상승 반전시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R&D 지출 확대 등 불확실한 미래 분야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거나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일에도 재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대기업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 경계를 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족쇄를 푸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재정 투입은 중소·중견·벤처기업에 집중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재원 우선 배분

재정 누수와 비효율적 지출 억제

아무리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려 해도 예산상 한계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국민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재원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 중소기업, R&D, 국방, 복지 등 재정지출 비중이 큰 분야가 많다. 국가 재정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누수, 비효율적 낭비성 지출이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지출하는 경향은 없는지, 국민적 관점에서는 성과가 미미함에도 부처의 이해관계가 접목되어 집행되는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불필요한 사업은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정부들의 선심성·낭비성 비효율적 지출에 대한 지적도 많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 주민들의 요구에 더 기민하게 대응하게 하는 등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재정 측면에서 자치단체장들의 치적을 쌓기 위한 축제, 행사 등 전시성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선출직 자리의 특성상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앞으로 지방분권화와 함께 지방재정 자율성은 더 높아져야겠지만,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준칙 등 제도적 기반 구축

금년도 재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 나가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를 감안할 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가 62.4%로, 경우에 따라서는 90% 이상 치솟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¹⁾ 더 나아가 국회 예산정책처는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043년 100%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218.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²⁾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재정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망국적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올해는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금년도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청년 실업,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위한 준비에 소홀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따라서 금년도 재정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어려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집행에 있어 자원의 최적 배분을 추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부디 재정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가문의 단비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 수행

1) 2060년 장기재정전망, 기획재정부(2015.12.)

2)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2012.6.)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전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wonheeldaum@hanmail.net

한국재정정보원 창립은
새로운 개혁의
단초 마련

2단계 재정 개혁을 위한 제언

재정 개혁의 인식을 위한 에피소드

1986년 석사 학위 논문으로 '재정융자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 개혁'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당시에는 자료를 찾으려면 국회 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원고를 작성하다가 수치는 빈칸으로 두고 나중에 국회도서관에 가서 채워 오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재정 관련 논문을 작성하려면 머리가 아니라 발로 작성해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었다. 자료와 데이터가 없어 이를 찾아돌아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예산개요」책자만 가지고 있어도 재정 전문가 흉내를 할 수 있는 시절이었다.

그러나 2017년에 예산 관련 강의를 하면서 가장 좋은 자료는 인터넷 검색이다. 실시간으로 재정 현황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이디어와 발상이 중요하다. 기초 자료의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로 운영해 오던 예산회계법을 폐지하고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재정 개혁을 완성한 바 있다. 이름하여 “3+1 재정 개혁”으로 계획(국가재정운영계획), 예산 우선순위의 결정(Top down system), 성과 관리(재정 사업 자율 평가)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 제도와 디지털 브레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OECD, World Bank에서도 우수 사례로 인정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3+1 개혁 중에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운영의 3가지는 모두가 퇴보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화가 강화되고 참여정부의 정권 이념에 따라 참여, 투명, 성과 등의 개념이 강조되고 분권화를 추진하였지만, 이제는 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브레인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지탱되고 있다. 이념과 가치는 변화하지만 기술은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기반으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과 같이 새로운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점차 시대가 요구하는 수요에 맞추어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하드웨어 위에 2016년에 한국재정정보원이 창립한 것은 새로운 개혁의 단초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우리의 재정 환경은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의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재정 개혁이 요구된다. 그것은 절차적인 관점이 아니라 재정 운영과 관련한 실체적 개편이다. 2016년에 정부가 ‘재정건전화법’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쉽지 않다. ‘우리의 재정이 위기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6년에 이은 2단계 재정 개혁의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제기되는 재정 개혁의 과제

최근 강호의 제헌들이 제각각 재정 개혁의 과제들을 주창하고 있다. 과거 외국 제도의 도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다른 외국 제도를 주창하는 딜레마도 발견된다. 조급한 개혁은 금물이다. 논의되는 개혁의 과제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재정 규율을 도입하여 국가 부채를 일정 수준으로 묶어야 한다.
- 2 Pay Go 원칙의 도입을 통해 의무적 지출의 증가를 통제하여야 한다.
- 3 중장기 재정 계획의 예측 능력을 제고하여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 4 국민의 선호도를 반영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 5 비효율적인 유사 중복의 재정 사업을 통제해야 한다.
- 6 재정 사업의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7 재정 회계 시스템을 개편하여야 한다.
- 8 국민에게 재정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 9 프로그램 예산 과목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 10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 11 재정 결정과 관련하여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재정 운영과 관련한
실체적 개편 필요



재정 개혁을 위한 생각의 단초

2006년 재정 개혁은 절차와 과정에 치중한 개혁이었다. 참여, 공개, 투명성 등의 개념이 강조된 이유이기도 하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의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과와 책임도 강조되었다. 한편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많은 정책 수단의 부담이 재정으로 전가되면서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우에 재정 건전화는 국가 신용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번 무너지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정부 주도형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재정 건전화를 지켜 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의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한 재정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백가쟁명의 재정 개혁 관련 생각들이 있지만 이들 목소리를 몇 가지로 정리하여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장기 계획과 예측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공적 연금, 공공 보험과 관련한 재정 추계는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모수 추계와 합리적인 모형을 통해 재정의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책 연구원의 책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재정정보원의 역할도 기대된다.

둘째는 재정 당국의 역할 정립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참여가 보장되고 많은 회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결과는 형식적 보고서로 남겨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순위의 결정 과정에서 기능별 분류와 프로그램 예산 과목 체계에 입각한 전략적 배분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재정 당국이 사업 부처의 세부 내역 예산 사업에 간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의사결정의 분권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다. 이럴 경우에 프로그램 예산 과목이 계획 관리와 성과 관리를 연계하는 접점을 마련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정보를 재정기획국, 재정관리국, 예산실이 잘 협력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재정기획국의 우선순위 결정, 재정관리국의 성과 정보가 예산실의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 결정에 연동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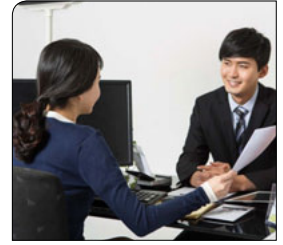
셋째는 2016년에 정부가 제안한 재정건전화법에 담긴 재정 규율과 Pay Go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국가 부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의무적 지출의 증가를 통제하여 재정의 경직성을 방지하는 재정 개혁을 시도할 시기이다. 이는 2단계 재정 개혁의 특징을 구분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넷째는 디지털 브레인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 연계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프로그램 과목과 세부 사업 단위의 과목 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재정 건전화
가 더욱 중요

계를 연계하는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체계화는 예산 집행의 추적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물론 시스템의 수요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매트릭스형 관리로 구비해야 한다.

다섯째는 국회의 재정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의 개혁도 필요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여 나눠 먹기식 결정 또는 지역구 사업 챙기기를 방지한다면 행정부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 2단계 재정 개혁의 요소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국회에서 거시적 재정 정책의 관점이 부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재정 개혁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기대

재정 개혁은 관리 기술의 효율성만으로 담보되지 못한다. 재정 운영의 철학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재정 적자를 관리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재정 적자가 문제로 인식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년 개원한 한국재정정보원이 이러한 재정 개혁에 대한 인식의 단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시스템을 관리하는 민간사업자의 대행이 아니라, 연구 기능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는 창조적 개혁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재정 현황을 보여주는 재정 지도(fiscal map)의 다양한 지표가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예컨대 현금주의 원칙과 발생주의 원칙에서 생산되는 지표를 하나의 축으로 포함하고,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원칙에서 생산되는 지표를 다른 하나의 축으로 포함하여 일종의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시계열로 관리하기도 하고, 지역 간에 비교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림을 통해 시각적으로 재정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축이 축소되거나 왜곡된 모습을 보이면 일정한 재정 위기의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그림이나 숫자를 시계열로 관리하면서 재정의 쟁점에 대한 시그널을 도출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잠수함의 토끼’¹⁾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 개혁 필요성을
제시하는 ‘잠수함의
토끼’ 역할을 해야

1) 게오르규의 소설 <25>에서 ‘잠수함의 토끼’가 등장한다. 초기의 잠수함은 기술 수준이 낮아 산소부족으로 승무원의 생명이 위협해질 때가 많았다. 그래서 잠수함에 토끼를 태워, 토끼가 질식해 죽으면 그것을 신호로 알고 물 위로 올라갔다. 토끼는 사람보다 산소부족을 더 못 견딘다.

특별 기획



01. 2016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장

02. 2016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Q&A

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장

mrblue2013@korea.kr

총세입 345조원,
총세출 332.2조원,
세계잉여금
2년 연속 흑자

2016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흔히 나라 재정은 공간에 비유된다. 한 해 동안 공간에 곡식이 어떻게 채워졌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또 남은 곡식은 얼마인지 등을 수치화하고 이를 확정하는 것이 결산 과정이다. 결산을 통해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정부는 결산 결과를 포함한 집행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나라 살림 결산 행사인 '2016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가 지난 2월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세입부·총세출부란 중앙관서별·회계별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결과를 기록한 총괄적인 회계장부이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출납 사무를 종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확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20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8조원 발생

2016년 총세입은 345.0조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더 징수되었다. 총세출은 332.2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결산상 잉여금¹⁾은 12.8조원, 세계잉여금²⁾은 8.0조원 흑자로 나타났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입 281.7조원, 세출 274.0조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7조원이며, 이월금 1.6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1조원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는 세입 63.3조원, 세출 58.2조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1조원이며 이월금 3.2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액(D)	세계잉여금 (C-D)
합계	345.0	332.2	12.8	4.8	8.0
일반회계	281.7	274.0	7.7	1.6	6.1
특별회계	63.3	58.2	5.1	3.2	1.9

1) 결산상 잉여금 = 총세입 - 총세출 2)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 다음 연도 이월액

법인세 · 소득세를 중심으로 총세입 증가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세 수입은 242.6조원으로 전년 대비 24.7조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산 대비로도 9.8조원 초과한 액수이다. 세외수입은 102.4조원으로 전년 대비 7.8조원 감소하였으며, 예산 대비로도 6.8조원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법인 실적 · 소비 · 부동산 분야에서 2015년 경제지표가 개선된 데다, 그간의 대기업 및 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 · 감면 제도를 정비한 것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문별 세입 · 세출 현황

(단위 : 조원)

	국세 수입					세외수입					증감 합계 (①+②)	
	2015년 결산	2016년		증감 ①		2015년 결산	2016년		증감 ②			
		예산	결산	전년 대비	예산 대비		예산	결산	전년 대비	예산 대비		
계	217.9	232.7	242.6	24.7	9.8	110.2	109.2	102.4	△7.8	△6.8	16.9	3.0
일반회계	210.8	225.8	235.7	24.9	9.9	51.1	53.6	46.0	△5.1	△7.6	19.8	2.2
특별회계	7.1	6.9	6.8	△0.2	△0.1	59.1	55.6	56.5	△2.7	0.9	△2.9	0.8

경제지표 개선 및
대기업 · 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가 원인

실제로 2016년 세수 실적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3대 세수원인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모두 2015년 대비 각각 7조원 이상 증가하고, 증가율도 12~1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최대 세수원인 소득세는 68.5조원으로 전년 대비 12.8%인 7.8조원이 증가하였다. 소득세 증가는 근로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 중 근로소득세는 3.9조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명목임금 상승 및 취업자 수 증가 등에 기인한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15.4% 증가한 13.7조원으로 소득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거래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인세도 전년 대비 15.7%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세입 증가에 기여하였다. 반면, 금융 관련 조세인 이자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2015년 대비 각각 17.6%, 4.3%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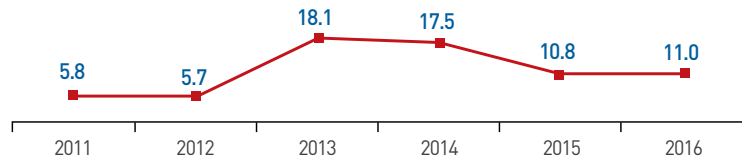
예산 집행률 사상 최고에도 불용액은 소폭 증가

2016년 총세출은 332.2조원으로 95.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 이후 최대치이다. 이월액은 4.8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0.2조원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불용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 및 중단되거나,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등 다양한 사유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하게 되는데, 2016년 중 발생한 불용액은 저물가, 저금리 등의 경제 여건 변동 및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률은 3.2%를 기록하여, 최근 2013년부터 2015년 3년간 평균 불용률 4.8%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연도별 불용액 발생 추이

(단위 : 조원)



향후 경기 위축 방지를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여력이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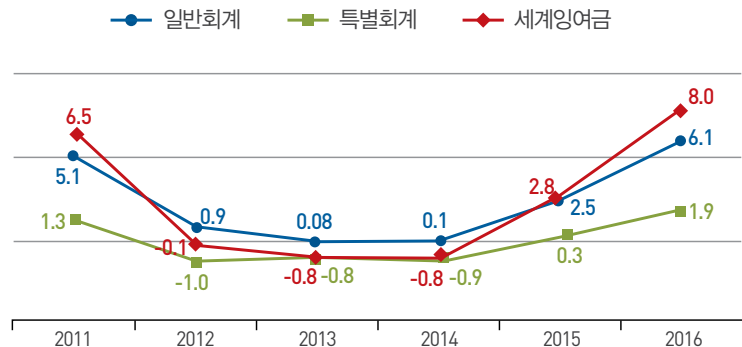
세계잉여금 2년 연속 흑자 발생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은 8조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보이다가 2015년 2.8조원의 흑자로 전환되었다. 2016년에도 8.0조원 흑자로서, 그 규모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데 기인하며, 이는 향후 경기 위축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여력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

연도별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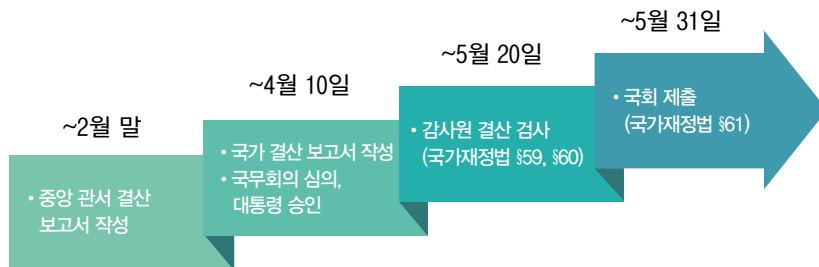
일반회계로부터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국가 결산에 대한 대통령 승인을 얻은 이후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 방안을 확정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①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의 정산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③ 채무 상환 ④ 추경예산 편성 또는 다음 연도 세입 조치 순서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특별회계로부터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개별법에 의해 특정 사용 순서 없이 다음 연도 해당 특별회계에 이입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금번 2016년도 세계잉여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16년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된 후 별도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향후 결산 추진 일정

금번 마감 결과를 기초로 각 중앙 관서는 2월 말까지 결산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종합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원에 제출하여 5월 20일까지 결산 검사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감사원의 결산 검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 결산 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 결산 일정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



2016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Q&A

2016년 세입·세출 결과를 놓고 “서민 불황인데 정부만 호황”, “정부의 세수 전망 부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통계를 참고해 세수증가 원인 등을 Q&A 형식으로 풀어 봤다. / 편집자 주(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shhan@kpfis.kr)

2016년
세수 증가 원인은
법인세, 부가세

Q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결국 서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 아닌가요?

A 2016년 세수는 전년 대비 24.7조원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따져도 11.3%나 되니,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어느 세목에서 세금이 많이 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누구의 부담이 컸는지 알 수 있겠지요.

세목별 국세 증감액·증감률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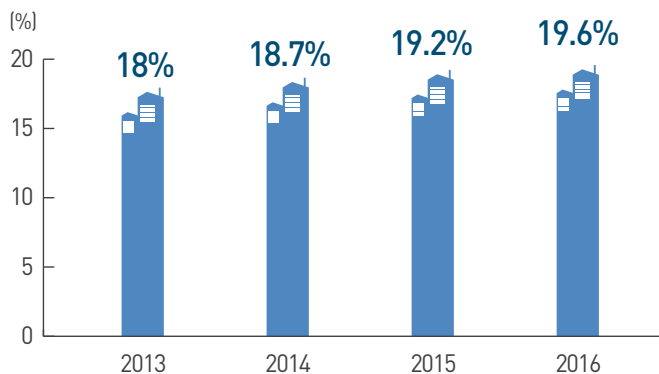
구 분	2015년 실적	2016년 실적	2015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17.9	242.6	24.7	11.3
○ 소 득 세	60.7	68.5	7.8	12.8
• 종합소득세	12.8	14.3	1.6	12.2
• 양도소득세	11.9	13.7	1.8	15.4
• 근로소득세	27.1	31.0	3.9	14.6
• 이자소득세	2.5	2.1	△0.4	△17.6
○ 법 인 세	45.0	52.1	7.1	15.7
○ 상속증여세	5.0	5.4	0.3	6.1
○ 부가기초세	54.2	61.8	7.7	14.2

○ 개별소비세	8.0	8.9	0.9	11.0
○ 증권거래세	4.7	4.5	△0.2	△4.3
○ 인지세	1.0	0.9	-	△5.0
○ 과년도수입	3.4	4.1	0.7	20.7
○ 교통에너지환경세	14.1	15.3	1.2	8.9
○ 관세	8.5	8.0	△0.5	△5.3
○ 교육세	4.9	4.9	-	0.2
○ 종합부동산세	1.4	1.3	△0.1	△7.5
○ 주세	3.2	3.2	-	△0.6
○ 농특세	3.8	3.6	△0.2	△4.9

첫째,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큰 세목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입니다. 2015년 42조원에서 2016년에는 52.1조원으로 15.7%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 개선돼 세전 이익이 크게 증가한 데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 주던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12월 결산 상장 법인들의 세전 이익을 보면 2014년 53.4조원에서 2015년 63.3조원으로 18.7%나 늘었습니다. 2016년 법인세는 이 2015년 세전 이익에 부과한 것입니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한 덕에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도 2015년 19.2%에서 지난해 19.6%로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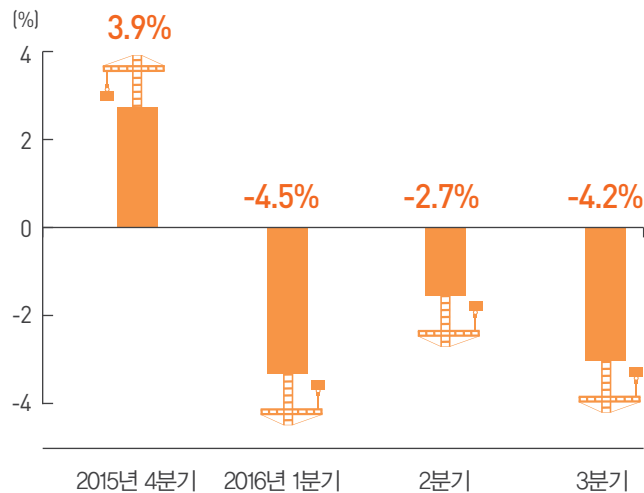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큰 세목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상출 기업 실효세율 추이



둘째, 부가세 증가율이 14.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민간 소비가 분기별로 전년 대비 2~3%씩 꾸준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들의 수출이나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기업들에게 돌려주는 환급액이 줄어든 것도 부가세 증가가 원인입니다. 실제 2016년 1~3분기 설비 투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이고, 수출 역시 지난해에는 4,956억 달러로 2015년(5268억 달러)에 비해 5.9%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 증감 추이(전년 동기 대비)



세수 증가의 큰 부분은
대기업과 자산가의
신고 납부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



셋째, 소득세가 12.8% 늘어나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득세 가운데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사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 등이 각각 15.4%, 14.6%, 12.2% 늘었습니다.

양도세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였고,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근로자 1인당 받는 명목임금이 4% 증가하고 상용 근로자 수가 1,259만 명에서 1,297만 명으로 3.1% 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소득 신고 금액이 11.9% 늘어난 것도 종합소득세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세수가 정부 전망보다 많이 걷힌 것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수출 감소 등에 따른 부가세 증가,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에 기인했습니다. 서민들이라고 부가세나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세수 증가의 큰 부분은 대기업과 자산가의 신고 납부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Q 2016년 추경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추경 편성 시 세수 전망을 잘못했기 때문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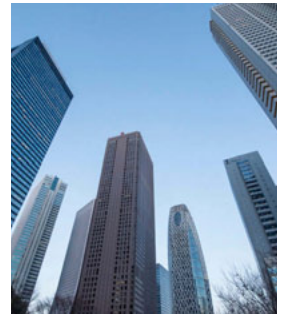
A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 전망과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추경(2016년 7월)이 과거와 달리 대규모 세입 증액 결정이었던 만큼 세입 증가가 확실한 세목만을 계산하다 보니 빚어진 일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자칫 세수 결손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 감소세이던 부동산 거래가 추경 이후 하반기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양도세가 많이 늘어난 것이라든지, 주식 시장이 당초 전망과 달리 호조세를 유지한 것, 저유가로 기름 소비가 늘면서 교통세가 늘어난 것, 소송 패소액 감소 등으로 전년도 수입이 늘어난 것 등 하반기에도 일시적 요인으로 세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추경 이후 9.8조원의 초과 세수가 생겼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경 대비 4.3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었으니 만큼(2016년 10월), “예측하기 힘든 일시적 요인에 의한 세수 증가”라는 정부 설명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Q 2016년 국세 수입 실적을 감안하면 2017년 세입 예산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 아닐까요?

A 지난해 추경예산 초과분 9.8조원의 상당 부분이 일시적 요인에 의한 세입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산 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세나 증권거래소 수익 등은 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미국 금리 인상, 보호주의 확산, 내수 약화 등 불확실성이 매우 큼니다. 따라서 “세입 과소 편성 여부는 올 상반기 세수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지, 지난해 실적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의 세수 전망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보수적 전망을
하였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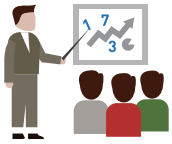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



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은 숫자를 이용해
재정 개념을 쉽게 설명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장입니다.

세계잉여금 / 총수입 / 총지출

김도일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원



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

2월호에는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을 참고하여 세계잉여금과 총수입 및 총지출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였다. (편집자주 / 김도일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원, doylek@kpfis.kr)

세계잉여금이란?

중앙과 지방정부의 한 해 모든 수입을 총세입, 모든 지출을 총세출이라고 합니다. 총세입 금액에서 총세출 금액을 뺀 것을 결산상 잉여금이라 하는데, 이 잉여금은 한 해 정부의 재산 상태를 파악했을 때 남은 돈을 의미합니다. 이 중 내년으로 옮겨 사용하는 금액을 제외한 것이 세계잉여금입니다.

$$\text{세계잉여금} = \text{결산상 잉여금}(\text{총세입액} - \text{총세출액}) - \text{내년도 이월액}$$

일반적인 국가 활동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정부 수입과 정부 지출을 포함하는 회계를 일반회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세계잉여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정부의 자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돈(교부세 및 교부금)을 정산하는 데 쓰입니다. 남은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사용하고, 여기서 남은 세계잉여금은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입니다. 그 이후 남은 금액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만들어진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용되거나 내년도의 수입에 포함됩니다.

2016년도에 발생한 약 8조원의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만일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30%의 법정 최소 비율을 적용한다면, 아래와 같이 지출 순서와 지출액이 결정됩니다.

세계잉여금 처리 방식(30% 적용 시)

(단위: 조원)

구분	산출 내역
① 교부세(금) 정산	• 교부세법 ·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산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A - ①) \times 30\%$
③ 채무 상환	• $(A - ① - ②) \times 30\%$
④ 세입 이입 · 추경 자원	• $A - ① - ② - ③$

세계잉여금

(단위: 억원)

구분 연도	일반회계 세입 (A)	일반회계 세출 (B)	결산상 잉여금(C = A - B)						
			이월액 (D)	세계잉여금(C-D) ¹⁾					
					사용				다음 연도 세입 이입
					지방교부 및 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 ²⁾	추경 재원		
2001	1,020,084	986,685	33,399	9,325	24,074	-	-	5,381	18,693
2002	1,133,800	1,089,183	44,617	11,756	32,861	-	-	14,168	18,693
2003	1,196,755	1,172,229	24,526	13,264	11,262	-	-	11,262	-
2004	1,196,460	1,182,362	14,098	12,372	1,726	-	-	1,726	-
2005	1,364,592	1,342,077	22,515	10,148	12,367	-	3,818	8,549	-
2006	1,478,667	1,448,360	30,307	16,577	13,730	13,728	-	-	-
2007	1,711,722	1,543,309	168,413	14,985	153,428	54,133	50,640	45,685	2,970
2008	1,815,858	1,754,695	61,163	15,400	45,763	2,947	21,836	20,979	-
2009	2,049,475	1,998,760	50,715	14,628	36,087	7,864	14,394	-	13,829
2010	2,052,235	1,971,371	80,864	21,350	59,514	15,817	22,285	-	21,412
2011	2,148,604	2,074,469	74,134	22,849	51,285	19,586	16,167	-	15,532
2012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1,886	3,390	3,257	-
2013	2,323,929	2,295,443	28,485	27,673	812	-	414	-	398
2014	2,392,256	2,363,607	28,649	27,685	964	-	491	472	-
2015	2,619,383	2,578,816	40,567	15,290	25,277	-	12,891	12,386	-

1)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의미

2)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을 포함

(출처: 「월간 재정 동향」 2월 호)

총수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인 수입 규모를 의미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모두 합하고,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사이의 내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 계산의 문제가 발생하여 회계·기금 간의 내부 거래를 제외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총수입

(단위: 조원)

연도	구분	총수입	국세 수입			세외수입			기금 수입		세입 세출·외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회보장 기여금		
2010		299.5	177.7	170.9	6.8	23.5	7.9	15.6	98.2	35.6	0.07
2011		323.0	192.4	185.0	7.4	24.0	9.1	14.9	106.5	38.9	0.20
2012		341.8	203.0	196.1	6.9	25.3	9.9	15.4	113.3	43.9	0.11
2013	3	83.0	47.1	45.6	1.5	7.5	4.1	3.4	28.3	10.9	0.01
	6	170.9	97.2	94.0	3.2	14.5	6.0	8.5	59.2	23.5	0.01
	9	261.4	152.3	147.5	4.8	20.0	7.6	12.4	89.1	34.7	0.01
	12	351.9	201.9	195.4	6.5	27.3	9.9	17.5	122.6	46.1	0.03
2014	1	34.7	25.2	24.9	0.3	1.7	0.6	1.1	7.7	3.8	0.01
	2	53.3	31.1	30.2	0.8	4.8	2.5	2.3	17.5	7.5	0.01
	3	86.2	48.7	47.5	1.2	6.9	3.1	3.8	30.6	12.9	0.01
	4	125.9	74.6	72.4	2.2	9.2	4.1	5.1	42.1	16.7	0.01
	5	149.5	87.8	85.3	2.5	10.9	4.5	6.4	50.9	21.3	0.02
	6	172.3	98.4	95.7	2.7	13.0	5.0	8.0	60.9	25.4	0.02
	7	209.5	124.4	120.7	3.7	14.7	5.8	8.9	70.4	29.3	0.03
	8	230.8	136.6	132.6	4.0	15.7	6.1	9.6	78.4	33.4	0.03
	9	259.9	152.6	148.3	4.2	17.8	6.6	11.1	89.6	37.4	0.03
	10	296.3	177.6	172.4	5.2	19.5	7.2	12.3	99.1	41.5	0.03
	11	316.8	189.4	183.9	5.5	21.0	7.7	13.3	106.3	45.7	0.04
	12	356.4	205.5	199.3	6.2	24.6	9.2	15.4	126.2	49.8	0.05
2015	1	36.8	25.7	24.9	0.8	1.6	0.5	1.0	9.6	4.0	0.01
	2	55.0	31.7	30.6	1.1	4.4	2.3	2.1	18.8	7.9	0.01
	3	89.1	50.2	48.8	1.4	6.6	2.9	3.7	32.3	13.3	0.01
	4	132.8	78.8	76.3	2.5	8.8	3.9	5.0	45.2	17.4	0.01
	5	159.3	93.7	90.8	2.9	10.3	4.3	6.1	55.2	22.4	0.02
	6	186.4	106.6	103.4	3.3	12.8	4.8	8.0	67.0	26.8	0.02
	7	226.6	135.3	130.9	4.4	14.3	5.3	9.0	77.0	31.0	0.03
	8	252.5	151.6	146.9	4.7	15.5	5.7	9.8	85.4	35.5	0.03
	9	280.2	166.5	161.5	5.0	17.1	6.1	11.0	96.5	39.7	0.03
	10	317.7	192.5	186.4	6.1	19.1	6.9	12.2	106.1	44.1	0.03
	11	343.3	206.2	199.8	6.4	20.9	7.5	13.5	116.1	48.5	0.04
	12	371.8	217.9	210.8	7.1	23.7	8.4	15.3	130.2	53.1	0.05
2016	1	40.2	30.1	29.1	0.9	1.4	0.5	1.0	8.7	4.2	0.00
	2	65.9	42.7	41.5	1.2	4.7	2.8	2.0	18.5	8.4	0.02
	3	103.4	64.0	62.4	1.5	6.6	3.2	3.4	32.8	14.2	0.03
	4	150.8	96.9	94.2	2.7	9.3	4.4	4.9	44.5	18.6	0.03
	5	179.8	112.7	109.7	3.0	10.9	4.9	5.9	56.3	32.0	0.04
	6	207.1	125.6	122.3	3.3	12.9	5.5	7.4	68.5	28.7	0.07
	7	249.0	155.4	151.0	4.3	14.4	6.1	8.3	79.2	33.1	0.07
	8	280.3	172.4	167.8	4.6	15.7	6.6	9.1	92.1	38.0	0.07
	9	309.9	189.1	184.2	4.9	17.6	7.3	10.4	103.1	42.5	0.09
	10	348.2	215.7	209.8	5.9	19.3	7.8	11.5	113.0	47.1	0.09
	11	372.5	230.5	224.3	6.2	20.7	8.4	12.3	121.2	52.0	0.10

※ 구성 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출처: 「월간 재정 동향」 2월호

총지출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 규모를 의미하며, 총수입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합한 이후에 내부 거래 지출과 보전 지출을 제외하여 구합니다. 총수입과 유사하게, 회계·기금 간의 내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중복 계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 거래를 제외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총지출

(단위: 조원)

연도	구분	총지출	예산		기금	세입 세출 · 외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0		282.8	200.2	156.4	43.8	81.8	0.84
2011		304.4	212.8	168.5	44.3	90.0	1.63
2012		323.3	225.3	178.3	47.0	95.8	2.25
2013	3	97.8	72.3	60.1	12.2	25.5	0.00
	6	199.5	149.8	120.2	29.6	49.5	0.26
	9	263.5	190.8	154.0	36.7	72.5	0.31
	12	337.7	239.1	191.6	47.4	98.2	0.33
2014	1	30.6	23.4	20.4	3.0	7.2	0.00
	2	61.6	46.5	38.8	7.7	15.1	0.00
	3	101.6	73.0	61.0	12.0	28.6	0.00
	4	129.7	93.0	77.3	15.7	36.7	0.01
	5	157.3	113.3	92.8	20.5	44.0	0.01
	6	196.6	142.8	115.0	27.8	53.8	0.03
	7	218.5	157.5	128.0	29.5	61.0	0.03
	8	240.8	173.0	140.8	32.3	67.7	0.03
	9	266.4	187.7	153.1	34.5	78.7	0.03
	10	290.9	205.5	168.0	37.6	85.4	0.03
	11	313.5	221.6	180.6	40.9	91.9	0.04
	12	347.9	243.7	198.2	45.5	104.0	0.18
2015	1	31.0	24.1	21.3	2.8	6.9	0.00
	2	64.1	49.6	41.4	8.1	14.5	0.00
	3	105.3	76.6	61.5	15.1	28.7	0.00
	4	141.9	103.5	82.6	21.0	38.3	0.01
	5	169.0	123.6	98.8	24.8	45.3	0.01
	6	210.3	153.6	123.3	30.3	56.7	0.02
	7	235.7	170.9	138.1	32.9	64.7	0.02
	8	262.4	189.7	154.3	35.4	72.7	0.03
	9	298.7	213.2	173.6	39.7	85.4	0.03
	10	319.2	226.5	184.5	42.0	92.6	0.03
	11	339.2	237.7	192.0	45.7	101.5	0.04
	12	372.0	256.8	206.0	50.9	115.0	0.19
2016	1	30.9	23.8	21.1	2.7	7.1	0.00
	2	68.0	51.8	43.7	8.1	16.3	0.00
	3	117.5	85.0	68.8	16.3	32.5	0.00
	4	146.6	106.2	86.8	19.4	40.3	0.01
	5	175.4	127.1	104.2	22.9	48.3	0.02
	6	215.1	154.9	125.8	29.2	60.2	0.03
	7	241.0	173.4	142.4	31.0	67.5	0.04
	8	264.5	189.4	156.1	33.3	75.1	0.05
	9	301.7	214.1	176.6	37.5	87.6	0.05
	10	330.9	234.7	194.7	40.0	96.2	0.05
	11	351.5	246.1	203.0	43.2	105.3	0.06

※ 구성 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출처: 「월간 재정 동향」 2월호

현안 분석

Analysis



현안 분석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연구원들이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재정과 관련한 현안을 연구·분석한
전문 보고서로 구성됩니다.

주요국 지출심사(Spending Review) 운용 구조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jazzsh@kpfis.kr

OECD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지출 심사를 도입

주요국 지출 심사제도 (Spending Review) 운용 구조

지출 심사(Spending Review)는 2007년 경제 불황 이후 OECD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지출 심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본적인 지출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 감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시 말해 재정지출 한도 내에서 지출 절약 방안의 파악과 적용에 대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출 심사는 총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출 심사의 도입 배경은 재정 건전성(Fiscal Consolidation) 확보를 위해, 재정 지출 총액의 제한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지출을 감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지출 심사의 대상은 신규로 제안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정 사업 지출을 포함한다.

지출 심사는 흔히 SR(Spending Review)로 불리며, 다양한 국가에서 CSR(Comprehensive Spending Review)¹⁾, PR(Program Review)²⁾, SOR(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³⁾, CER(Comprehensive Expenditure Review)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출 심사는 심사의 주제와 범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심사 주제에 따라 프로그램 심사(Program Review), 과정 심사(Process Review), 기관 심사(Agency Review)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심사는 효율성 검토(Efficiency Review)와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효율성검사는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제공하여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확보하지만, 전략적 검토는 제공되는 서비스나 이전 지출의 규모를 줄여 나가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다.

또한, 심사의 범위에 따라 선택적 지출 심사(Selective Spending Review)와 포괄적 심사(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로 구분되는데, 선택적 심사는 지

1)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CSR)는 2010년 영국에서 시행된 지출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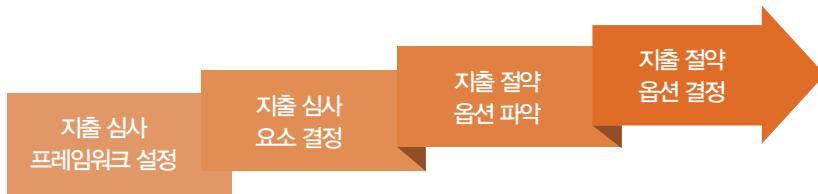
2) Program Review(PR)는 1990년대에 캐나다에서 시행된 지출 심사 제도임

3) 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SOR)는 2011년과 2012년에 캐나다에서 시행된 지출 심사 제도임

4) Comprehensive Expenditure Review(CER)는 2010년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지출 심사 제도이며, Interdepartmental Policy Review(BO)라고 불리기도 함

출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주제에 한정하여 심사하게 된다. 반면 포괄적 심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 모든 부처 및 영역의 재정 사업을 심사하게 된다. 다만 포괄적 심사를 하더라도 지출 심사의 주제 및 범위는 별차이가 없다. 특히 지출 심사 시 역할 중요도에 따라 하향식 심사(top-down Review), 상향식 심사(bottom-up review), 그리고 결합 심사(joint review)로 구분할 수 있다. 지출 심사는 아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robinson, 2013).

〈그림 1〉 지출 심사의 단계



자료: OECD(2013),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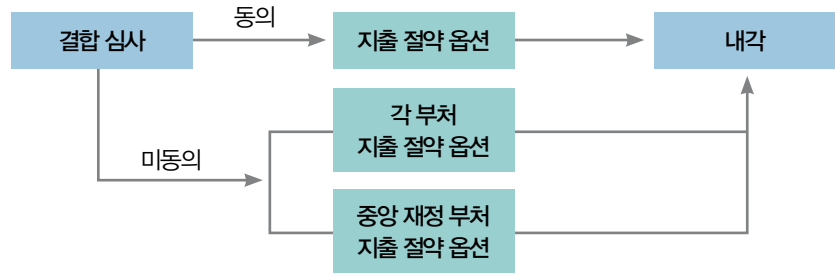
첫 번째 단계인 지출 심사 프레임워크 설정 단계에서는 지출 심사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요소들을 결정한다. 이러한 요소는 지출 심사 과정에 포함되는 예산이 의무 지출인지 재량 지출인지 여부와 지출 심사의 범위를 기준으로 포괄적 심사인지 전략적 심사인지에 대한 결정, 지출 심사의 목적이 효율성 검토인지 전략적 검토인지 여부이다. 또한, 지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감축 목표가 있는지에 관해 결정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특정 지출 심사의 요소(parameter) 결정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출 심사 과정의 단일 라운드 각각의 구체적인 특징이 결정된다. 여기에는 명확한 심사 주체 결정, 심사 주체 결정에 대한 기준 구체화, 지출 절약 목표의 정도와 심사 일정 구체화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단계는 지출 절약 옵션을 파악하는 단계로 각 부처의 최종 의사 결정자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각 부처의 지출 한도 내에서 가능한 지출 절약 옵션을 파악한다. 이 단계에서는 중앙재정부처와 지출 관련 부처의 역할에 따라 구체적인 지출 심사의 유형이 결정되는데, 그 유형에는 하향식 심사(top-down spending review), 상향식 심사(bottom-up spending review), 결합 심사(joint spending review)가 있다. 이 중에서 결합 심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지출 심사는
지출 심사 프레임워크
설정, 지출 심사 요소
결정, 지출 절약 옵션
파악, 지출 절약 옵션
결정의 네 단계로
이루어짐**

〈그림 2〉 결합 심사(Joint spending review)



자료: OECD(2013), p.21

〈표 1〉 중앙 재정 부처와 지출 관련 부처의 역할에 따른 지출 심사 유형

하향식 심사 (top-down)	상향식 심사 (bottom-up)	결합 심사 (joint)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최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종전)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자료: OECD(2013) 및 caroline(2014)에 근거하여 저자 재작성

주: caroline(2014)에 의하면 하향식과 상향식을 결합한 결합 심사라고 인식하고 있음

주요 심사 주체는
지출 심사 단계별로
다른 역할 수행

마지막 단계는 지출 절약 옵션 결정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세 번째 단계에서 제안된 지출 절약 옵션들 중 시행 가능한 대안을 놓고 최종 의사 결정자가 지출 절약 수단을 결정하면 각 부처는 결정된 지출 절약 옵션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게 된다.

지출 심사 단계별 주요 심사 주체는 지출 심사의 각 단계마다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심사 주체에는 정치적 리더십, 중앙 재정 부처, 지출 관련 부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각 단계에 따른 주요 심사 주체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지출 심사 단계별 주요 심사 주체

	지출 심사 프레임워크 설정	지출 심사 요소 결정	지출 절약 옵션 파악	지출 절약 옵션 결정
정치적 리더십	○	○		○
중앙 재정 부처	○	○	○	
지출 관련 부처			○	
외부 전문가			○	

자료: OECD(2013), p.18

지출 심사 주제에 따른 분류

지출 심사는 심사 주제에 따라 프로그램 심사(program reviews), 과정 심사(process reviews), 기관 심사(agency reviews)로 분류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심사는 특정한 범주의 서비스나 이전 지출과 같은 특정한 사업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또한, 프로그램 심사는 전략적 지출 절약(strategic savings) 또는 효율성 지출 절약(efficiency savings) 요인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

〈표 3〉 목적에 따른 분류

전략적 검토 (전략적 지출 절약)	효율성 검토 (효율성 지출 절약)
네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자료: OECD(2013)에 추가하여 재작성

- 과정 심사는 정부 서비스 생산을 위한 특정한 사업 진행 과정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여기에는 정부 조달, IT 기술 관리와 운용, 인적자원 관리와 운용 등의 과정이 포함되며, 전략적 지출 절약보다는 효율성 지출 절약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기관 심사는 부처를 포함한 모든 정부 기관을 심사 대상으로 하며, 기관의 모든 재정 사업이 심사 대상이 된다.

프로그램 심사와 과정 심사는 특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직적일 수도 있고, 수평적일 수도 있다. 수평적 심사(horizontal program review)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효율성 심사가 중요한 변인이 된다. 한편, 수직적 과정 심사(vertical process review)는 여러 정부 기관에 걸친 사업 과정의 특정한 영역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표 4〉 지출 심사 주제에 따른 유형

프로그램 심사	과정 심사	기관 심사
덴마크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아일랜드

자료: OECD(2013)에 근거하여 저자가 재작성

프로그램 심사는
목적에 따라
전략적 검토와
효율적 검토로
분류됨

지출 심사 주무 부처(Key Role)에 따른 분류

지출 심사에서 각 부처의 역할은 국가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재정 부처가 지출 심사를 계획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지출 계획을 감독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때, 각 부처는 재정 부처와 함께 부처별 재정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각 부처는 주된 역할에 따라 하향식 심사, 상향식 심사, 그리고 결합 심사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Prime Minister)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재정 부처의 참여는 제한되며, 각 부처의 참여가 평등하다. 재정 부처가 주된 역할을 하는 국가는 영국과 아일랜드이고, 각 부처 TF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이며, 독립위원회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이다.

〈표 5〉 주무 부처에 따른 분류

국무총리	독립위원회	각 부처 TF	재정부처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자료: OECD(2013)에 근거하여 저자가 재작성

지출 심사 단위로
COFOG의 대분류와
중분류 체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COFOG에 따른 분류

예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분야·부문 등 분류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국제표준지표가 활용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정부 지출에 관한 한 UN 기준의 COFOG(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가 활용되고 있다. COFOG는 UN 기준으로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와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가 동일하며, 국가 간 재정지출 비교 수단으로 유용하다(대분류, division 또는 first-level COFOG data). 최근 EU 국가에서는 중분류(group, 또는 second-level COFOG data)를 활용하여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다(OECD, 2015). 예컨대 COFOG 체계는 다수 부처에 걸쳐 집행되는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실업 사업 지출 등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평적 지출 심사를 할 수 있다(GFSM, 2014). 거시적 관점에서 COFOG의 대분류와 중분류 체계를 지출 심사 단위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지출 심사 운영 형태

영국

영국의 지출 심사는 상향식 심사 방식⁵⁾으로 재무부에서는 각 부처의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지출 삭감 계획은 부처 재량이며 재무부와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 세부적으로는 포괄적 지출 심사, 중기 재정 계획과 연계, 전략적 심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심사 단위는 부처를 대상으로 한다.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지출 심사는 2014 CER을 시작으로 지출 부처의 지출 검토를 통해 2015년 지출의 5% 감축이라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지출 심사 과정이 예산 계획(재정 준칙, 중기 재정 계획, 성과 중심 예산 제도)과 연계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Howlin and Kennedy, 2016:21). 세부적으로는 포괄적 지출 심사, 중기 재정 계획과 연계, 효율성 심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심사 단위는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지출 심사는 4년 주기의 중기 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재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포괄적 지출 심사, 중기 재정 계획과 연계, 결합 심사, 전략적 심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심사 단위는 20개 정책 부문⁶⁾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 단위를 포함한
국가별 지출 심사
운영 형태는 상이함

캐나다

캐나다 지출 심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상향식 지출 심사와 프로그램 또는 기관 단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특히 각 부처별 상위 5%와 하위 5%의 우선순위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 성과가 있는 사업에 그 예산을 재배분·재투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포괄적·운영심사, 중기 재정 계획과 연계, 전략적 심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심사 단위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덴마크

덴마크의 지출 심사는 종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재정 건전성(Fiscal Consolidation)을 확보하기

5) Caroline(2014)에 의하면 상향식과 하향식이 결합된 결합 심사로 인식하고 있음

6) 1. 에너지 및 기후; 2. 생활환경과 자연; 3. 상하수도; 4. 주택; 5. 아동 복지; 6. 교육의 생산성; 7. 교육 수준의 향상; 8. 기술 혁신과 R&D; 9. 고용 증대; 10. 실업; 11. 의료 서비스; 12. 장기적 의료 서비스; 13. 국제협력; 14. 망명, 이민과 교화; 15. 치안과 테러 방지; 16. 세수 관리; 17. 최저 생계비 보조금; 18. 공공행정; 19. 기업 정보 및 공공부문; 20. 국제안보

위해 총지출을 삭감하는 데 주안을 둔다. 지출 심사의 운영 주기는 필요한 경우이며, 결합 심사, 기관·프로그램 심사, 효율성 검토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합동 TF가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별 지출 심사의 운영 형태는 다음 <표 6>과 같이 다양하다. 지출 심사의 운영은 중기 재정 운영 계획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설정하는 국가도 있지만, 매년 또는 필요시마다 지출 심사를 활용하는 국가가 있다. 또한 심사 유형으로는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결합(joint) 심사가 있으며, 심사 주체·단위는 일선 부처(department) 또는 기관(agency)을 주된 대상으로 하지만 부문을 주된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사업 심사의 목적은 전략적 검토 또는 효율성 검토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출 심사의 주된 역할은 재무부 또는 관련 TF라 할 수 있다.

<표 6> 해외 사례 종합

국가	지출 심사 형태	운영 주기	심사 유형	심사 주체·단위	사업 심사 목적	주무 부처
영국	포괄적 심사	3~4년	상향식(결합)	부처	전략적	재무부
아일랜드	포괄적 심사	3년	하향식	부처·기관	효율성	공공지출 개혁부
네덜란드	포괄적 심사	4년	결합	부문	전략적	심사 TF
캐나다	전략적 심사·운영 심사	매년	상향식	프로그램·기관	전략적	재무위원회
덴마크	지출 심사	필요시	결합	기관·프로그램	효율성	부처 합동 TF

각국의
지출 심사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고려하여 향후 한국의
지출 심사에 반영 필요

각국의 지출 심사가 한국에 주는 함의

지출 심사는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와 지출 절약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만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포괄적 심사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심사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인데, 선택적 지출 심사가 더 타당한 대안일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 재정 사업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점검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지출 절약 요인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둘째, 영국의 경우와 같이 3~4년에 한 번씩 중기 재정 계획과 연동하여 정부 재정 사업 전반의 포괄적 심사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다. 왜냐하면 매년 또는

상시적으로 지출 심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안은 중기 재정 계획과 지출심사가 잘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기 재정 계획의 정확성 또는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출 심사 유형에 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향식과 상향식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산재해 있다. 상향식 심사를 활용하는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각 부처별 우선순위 상·하위 5%에 속하는 사업은 무조건 삭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부처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재정 사업을 비교·평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하향식 심사도 국가 차원에서는 활용 가능한 기법이지만 정부 재정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결합 심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심사 주체 및 단위에 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부처 또는 기관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덴마크의 경우 프로그램과 기관에 기초하여 지출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부처 또는 기관 단위로 지출 심사를 하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유사 중복 사업 등을 조정하기란 다소 제한이 있다. 따라서 부문 단위에 기초하여 지출 심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사업 심사 목적에 따라 전략적 또는 효율성 검토를 활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출 감축을 통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검토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성과 정보 및 원가 정보 등이 축적된 이후에는 효율성 검토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겠다.

여섯째, 주무 부처(key role)는 재정 부처가 주된 기능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재정 사업을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대한 재정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출 절약 수단을 전부 고려하는 것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위원회 또는 지출 심사 TF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네덜란드 형태의 지출 심사 도입을 면밀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심사 주체,
심사 단위 및 심사
목적은 고려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출 심사 도입 필요

참고 문헌

- Caroline Vandierendonck. (2014). Public Spending Reviews: design, conduct, implementation. European Commission.
IMF. (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obinson, Marc. (2013). Spending Reviews, OECD Journal on Budgeting, 13(2), 1C.
OECD. (2013). Spending Reviews, Working Party of Senior Budget Officials. OECD Publishing.
. (2015). Government at a Glance 2015,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5-en Howlin, J., and Kennedy, F. (2016). Spending Reviews in Ireland: Lessons for the future. (IGEES Staff Papers)

동향과 소식

Trends / News



국내외 재정 관련 동향과

한국재정정보원의 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내외 재정 동향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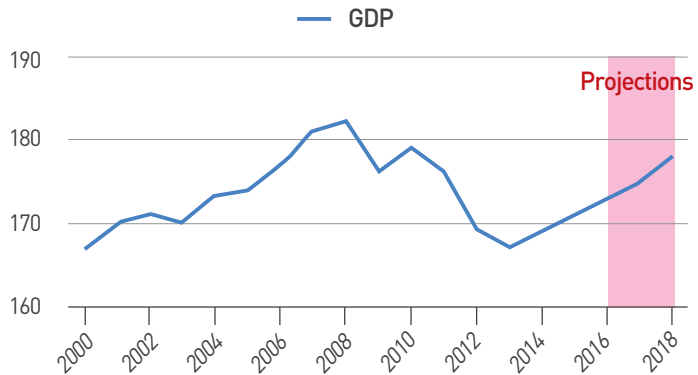
국내외 재정 동향

● OECD, 유럽 경제 위기 이후 포르투갈의 경제 회복 지속 (2017.2.6.)

- 경제 위기 이후 포르투갈의 경제가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회복되고 있음
 - ▶ 특히 이러한 구조적 개혁은 경제성장을 증가, 실업률 감소, 수출 실적 개선 등을 이끌었음
- OECD는 남아 있는 직면 과제에 대한 대응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음

〈GDP 변화〉

(단위 : 10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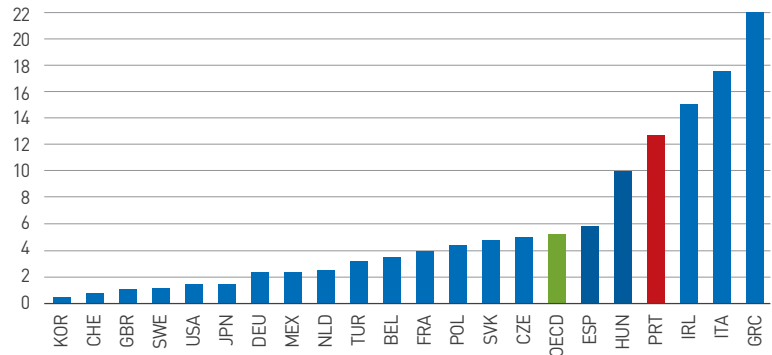
자료 : OECD(2017), Economy Survey of Portugal 2017

- OECD는 “OECD Economic Survey”를 통해 투자와 경제성장 및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는 포르투갈의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부채 감축과 금융 시스템 내의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s: NPL)을 처리할 것을 강조함
- 특히 포르투갈의 부실채권은 총채권의 12% 이상을 차지하여, 유럽 국가들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따라서 은행의 높은 부실채권 비중 감축, 부실기업 채권(distressed cooperate debt) 시장 조성, 파산절차 관련 규정(insolvency rules)의 절차 개선 등 기존 규제의 유인 체계 강화가 요구됨

국내외 재정 동향

Global
Fiscal Trends

〈총부채 중 NPL의 비중, 2016 2Q〉



자료 : OECD(2017) Economy Survey of Portugal 2017

- 이뿐만 아니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경영 환경(business environment)과 관련하여 OECD는 법제도 역량의 강화, 전기 요금 및 임대료 경감, 전문 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항만 운영의 효율성 증대, 토지 이용 규제 및 지방정부의 허가 절차의 개정 등을 제시함
- 포르투갈은 여전히 유럽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한 국가 중 하나임. 다만 최근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어 고무적으로 평가됨. OECD는 이와 관련하여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기술 습득을 통한 역량 강화가 경제성장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함
 - ▶ 이를 위해 기초 교육 및 중등 교육의 강화,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통합과 평가의 강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산학 연계 강화,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생애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함

공공 부문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부채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잠재 경제성장률 및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출과 투자 방향성을 설정해야 함

국내외 재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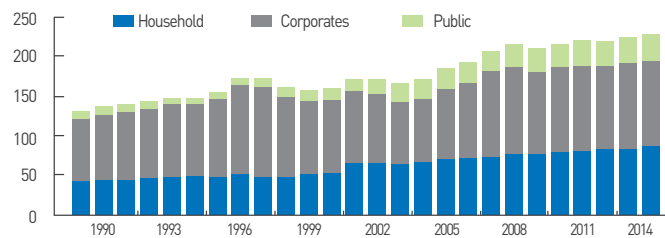
Global
Fiscal Trends

● IMF, 韓日의 잃어버린 20년 진입 가능성 평가 (2017.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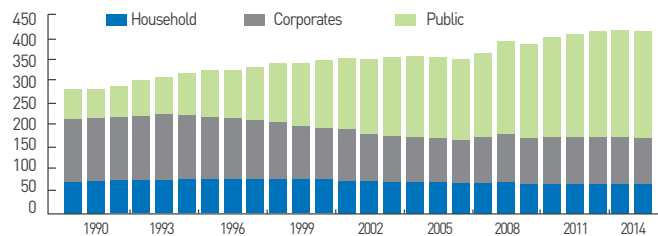
-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경제적 불황 여건이 과거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
 - ▶ (인구구조 변화) 기대 수명 증가, 출산율 감소, 제한적 이민 정책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추세는 과거 일본의 패턴과 유사
 - ▶ (잠재성장률 감소) 한국과 일본은 노동 투입량 및 자본 투입 감소, 회생 불가능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 지연 등에 의한 생산성 하락이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
 - ▶ (노동시장 분할) 노동시장의 분할은 한국, 일본 두 국가에 있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공통적으로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worker) 비율이 높음(2014년 한국 22%, 1990년초 일본 22%).
- 한국, 일본 두 국가는 재무 상태가 취약하다고 평가되나 그 정도는 상이함 (2014년 한국 GDP 대비 100%, 1990년초 일본 GDP 대비 140%).
 - ▶ (기업) 한국의 기업 부채는 일본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조선, 해운, 철강 등 일부 업종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이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
 - ▶ (가계)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이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 정부의 DTI 인하(현 60%→30~50%), DTI 집단 대출 적용, 은행·비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
 - ▶ (정부) 다만 우리나라 정부 부문 부채는 일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50%를 상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구구조와 노령화를 감안해 예측한 결과인 것으로 이루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한국과 일본의 대차대조표〉

Korea: Debt to GDP(Percent)



Japan: Debt to GDP(Percent)



Sources: BIS, WEO.

국내외 재정 동향

Global
Fiscal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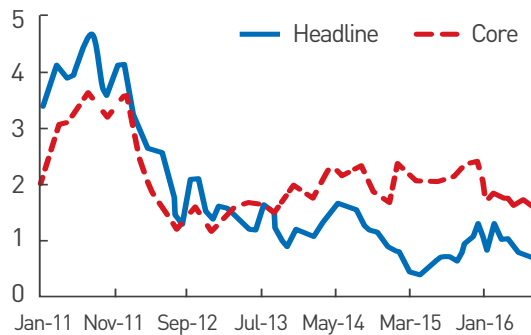


• 현재 한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지만, 글로벌화 및 향후 고령화 등은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

- ▶ 최근 유가 등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근원 인플레이션은 2014~2015년 2% 정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높게 유지
- ▶ 향후 ① 세계화로 인한 금융 통합이 진전될수록 정책 입안자들의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유인 감소, ② 세계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총공급 증가로 인한 물가하락), ③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은 디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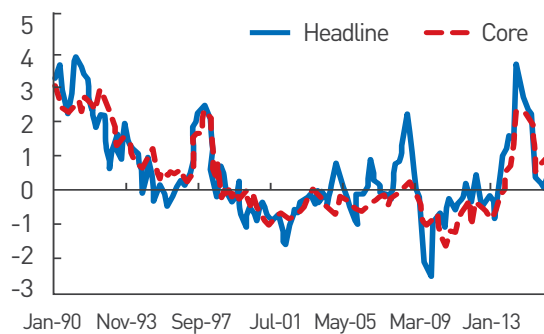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의 물가 상승률 추이(전년 동기 대비)〉

Korea



Source: Haver.

Japan



Source: Haver.

아직까지 한국의 재정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한 부실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일본이 경험한 장기 침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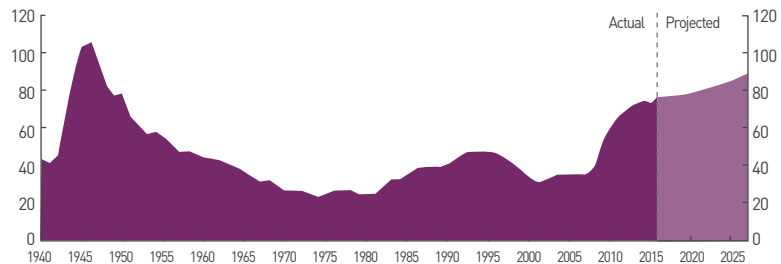
● CBO, 올해 재정 적자 전년 대비 감소 전망 (2017.1.24.)

-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7년 재정 적자가 2016년 5870억 달러에서 5590억 달러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 ▶ 적자 비율은 GDP 대비 3.2%에서 2.9%로 감소하여 2019년까지 GDP 대비 3.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 (세입과 세출) 개인소득세 징수액의 증가와 순이자 지출의 증가로 세입과 세출은 올해 약 4%대로 증가할 것이며 GDP 대비 비중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
 - ▶ (세입) 10년간 GDP 대비 17.8%(2017년)에서 18.4%(2027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50년간의 평균(17.4%)보다 높을 것으로 평가
 - ▶ (세출) 향후 몇 년간은 GDP 대비 21% 정도로 예측되며 지난 50년간의 평균값인 20.3%보다 높을 것으로 나타남. 의무 지출과 이자 지출의 증가로 인해 2027년에는 GDP 대비 23.4% 수준에 이를 것임
- 지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 폭을 상회함에 따라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점차 확대되어 2027년엔 1조4000억 달러(GDP 대비 5.0%)에 달할 것으로 예측
 - ▶ 사회보장제도, 노인의료보험제도, 순이자와 같은 지출 증가로 인하여 2019년 이후 재정 적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공공 부문 부채) 2017년 GDP 대비 77%(15조 달러)에서 2027년까지 GDP 대비 89%(2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공공 부문 부채 추이〉

Federal Debt Held by the Public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Sourc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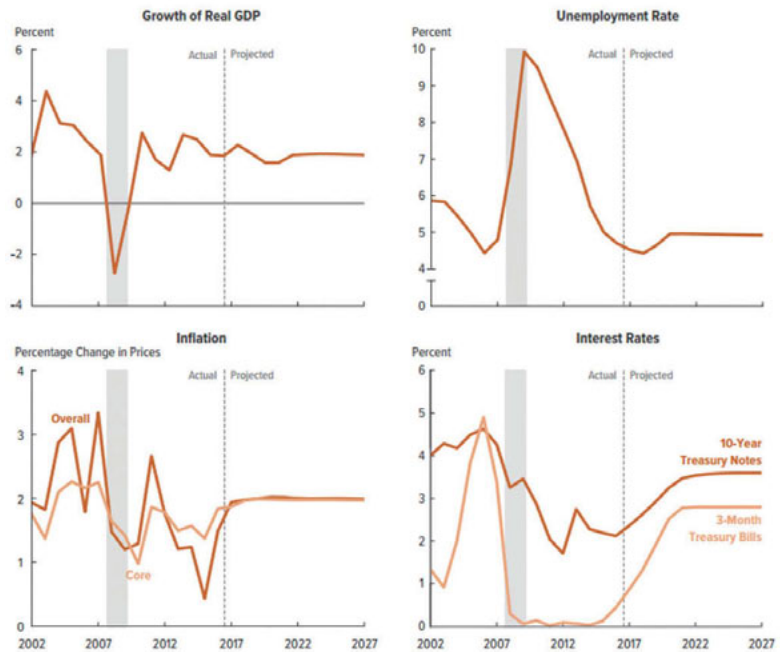
- 그러나 향후 2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경제 침체가 완화되고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 (경제성장) 개인 소비, 기업 투자,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하여 2016년 4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GDP는 연평균 2.1%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슬랙(slack)은 2016년에 160만 명으로 기록되었으나 2018년에는 경제성장과 고용의 확대로 인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
- ▶ (인플레이션) 경제 침체 완화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며 2017년에는 1.9%, 2018년에는 2.0%를 기록할 전망
- ▶ (이자율) 연방 기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4분기엔 1.1%, 2018년 4분기에는 1.6%, 이후에는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에서의 실제값과 CBO 예측값의 비교〉

Actual Values and CBO's Projections of Key Economic Indicators

CBO projects that economic activity will expand at a pace this year and next that will lower the unemployment rate and place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and interest rates.



Sourc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using data from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and the Federal Reserve.

Real GDP is the output of the economy adjusted to remove the effects of inflation. The unemployment rate is a measure of the number of jobless people who are available for work and are actively seeking job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labor force. The overall inflation rate is based on the price index for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the core rate excludes prices for food and energy.

For real GDP growth and inflation, percentage changes are measured from the fourth quarter of one calendar year to the fourth quarter of the next. For the unemployment and interest rates, data are fourth-quarter values.

GDP = gross domestic product.

미국 경제의 회복은 수출 증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금 이탈, 시장 변동성 증가와 같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미국 경제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국내외 재정 동향

Global
Fiscal Trends



● IMF, 그리스 경제 비판적 전망과 함께 부채 탕감 권고 (2017.2.7.)

- (경제 전망) IMF는 그리스의 채무 수준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하방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발표
 - ▶ 2015년 말, 그리스 공공 부채는 GDP의 180%까지 증가하여 금융 위기 전에 비해 65% 상승하였으며, 이는 경제 기반 약화와 함께 유럽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 프로그램 이행에 방해 요소로 지적됨
 - ▶ 특히, 구제금융협정(MoU)의 재정 흑자 목표는 GDP의 3.5% 수준이지만, 현 정책상의 재정 흑자는 GDP의 약 1.5% 수준임

General Government Operations, 2015-18(ESA 2010)
[Percent of GDP]

	2015	2016	2017	2018
Total Primary Revenue	47.8	49.3	47.5	46.3
Indirect taxes	16.1	16.9	16.7	16.5
Direct taxes	9.4	9.9	9.0	8.7
Social contributions	13.9	13.8	14.0	13.8
Other revenue	8.4	8.6	7.7	7.3
Total Primary Expenditure	47.6	48.4	46.5	44.8
Social benefits	22.2	22.2	21.4	20.2
Compensation of employees	12.3	12.3	12.1	11.7
Other expenditure	13.1	13.9	13.0	12.9
Primary Balance	0.2	0.9	1.0	1.5

Sources: Ministry of Finance, and IMF staff estimates.

- 이에,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망치에 대해 대폭 수정이 요구되어 경제성장률은 2018년 2.6%에서 2018년 1.2%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

Key Economic Indicators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percent change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al GDP	-0.2	0.4	2.7	2.6	2.4	2.0
Total Domestic Demand	-0.2	-0.4	2.2	2.2	2.3	1.9
Private Consumption	-0.2	0.8	1.5	1.4	1.2	1.0
Public Consumption	0.0	0.7	0.5	0.5	2.0	1.7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0.2	3.0	9.5	9.0	8.0	6.2
Foreign Balance(contribution)	0.9	-0.1	0.5	0.4	0.0	0.1
Exports	3.4	1.0	6.5	6.0	4.8	4.2
Imports	0.3	1.2	4.6	4.6	4.7	3.7
Unemployment Rate(percent)	24.9	23.2	21.3	19.8	19.0	18.4
HICP(period average)	-1.1	0.0	1.2	1.4	1.6	1.7
GDP Deflator	-1.0	0.1	1.4	1.5	1.5	1.6

Sources: Bank of Greece; and IMF staff estimates.

국내외 재정 동향

Global Fiscal Trends



Downsid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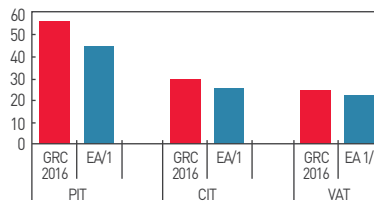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2021
Real GDP Growth (percent)	1.1	1.2	1.2	0.8	0.6
Contributions (percentage points)					
Final Consumption	0.5	0.7	0.5	0.2	0.1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0.3	0.6	0.6	0.5	0.5
Foreign Balance	0.3	0.1	0.1	0.1	0.1
Primary Balance (percent GDP)	0.5	0.6	0.4	0.4	0.4

Sources: IMF staff estimates.

- (정책 제언) 이에, IMF는 세원(Tax Bases) 강화와 연금 지출 삭감 등을 통해 부채 탕감을 주문하였음

- ▶ 최근 그리스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연금 적자 규모는 GDP의 11% 수준으로, 유럽 평균 2.5%의 4배 수준임을 감안하면, IMF는 여전히 연금 지출이 높은 것으로 판단
- ▶ IMF는 현재 그리스의 세율(Tax Rate)은 유럽 평균보다 높지만, 탈세 등으로 대상 세원이 부족하여 실제적인 세입은 많지 않다고 지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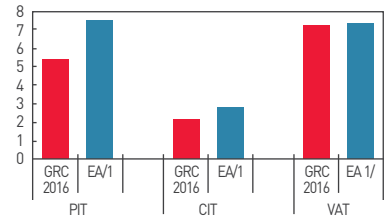
Tax Rates, 2015
(Percent)



Source: OECD Tax Database.

1/ Simple averages of the top marginal PIT rate, combined central and subcentral government: CIT rate, and the standard VAT rate for euro area countries

Tax Revenues, 2015
(Percent of GDP)



Source: Eurostat.

1/ Simple averages of PIT, CIT, and VAT revenues for euro area countries.

- 더불어, IMF는 그리스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민영화 촉진과 R&D 투자 확대 등 지속적인 개혁(Reform)을 요구하였고, 유럽연합에는 그리스의 채무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그리스 구제금융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위험성이 증가함. 그리스의 부채 위기 사례를 볼 때, 한국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운용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 한국재정정보원 기타 공공 기관 지정

- 2017년 1월 25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한국재정정보원이 '기타 공공 기관'으로 신규 지정
- 앞으로 공공 기관 알리오 시스템 경영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 기관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국민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
- 한국재정정보원은 향후 공공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공공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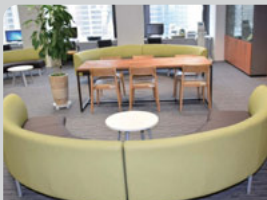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가 결산 행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려

-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총결산하는 '2016 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 마감 행사'가 2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개최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 회계연도의 총세입부 ·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 · 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확정
- 본마감 결과를 기초로 정부는 '2016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감사를 거친 뒤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



● 한국재정정보원의 스마트한 일자리 환경 공유 및 경험 전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제7기 정부 3.0 정책 과정'에 참석한 40여 명의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스마트한 일자리 환경을 소개하는 현장 학습 체험을 제공
- 국가 재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은 탄탄한 보안을 갖추고 있으며, 변동 좌석제 운영, 클라우드 PC, 개인 스마트라커 등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비
- 한국재정정보원은 앞으로도 스마트한 사무 공간과 정보 기술을 도입하고, 끊임없는 관습 개혁으로 실질적인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PFIS News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략적 방안 모색을 위한 IT 기술 세미나 개최

- 한국재정정보원 내 dBrain운영본부는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IT 신기술 동향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
- 올해 1월과 2월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
- 세미나 개최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원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dBrain 발전을 위한 IT 기술 분야의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

아시아개발은행 실무자 면담을 통한 상호 협력 관계 강화

- 아시아개발은행(ADB) 공공행정분야 국장은 지난 2016년 12월 논의되었던 양 기관 협력 파트너십 협약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2월 14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
- 재정정보화시스템(FMIS) 분야 세미나 개최, 연수 프로그램 등 단기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강화될 예정
- 장기적으로는 양 기관 파트너십 협약을 통해 아시아개발은행(ADB) 내 회원국 대상 dBrain 수출 추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키르기즈공화국 재정 공무원 한국재정정보원 방문

- 키르기즈공화국 재무부와 경제부 소속 고위 공무원 일행은 2월 20일 경제발전 공유 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연구 및 연수의 일환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
-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반영된 dBrain 시스템 소개를 통해, 키르기즈 재무부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 및 경험을 전수
- 그 이외에도 정보원 설립 배경, 주요 기능, 국제 협력 전략 등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한국재정정보원 의 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dBrain) 운영

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재정 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재정 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재정정보 연구본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 통계를 분석하고
재정 제도 개선을 지원합니다.

재정 교육 사업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dBrain 국제 협력

국제 금융 기구(WB, IDB, ADB 등)와
재정 정보화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재정 혁신 및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합니다.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정보 통신망을 보호하는
재정 경제 분야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로서
종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고 보조금 통합망 운영

국고 보조 사업 전 과정을 통합화·표준화·전자화하여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근절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합니다.

월간

나라 재정

2월호

월간 나라재정 2017년 2월호

통권 제2호 (발행번호)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908-8255

홈페이지 www.kplis.or.kr

발행인

이원식(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편집위원장

박용주(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본부장)

편집위원

최병호(부산대학교 교수)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강영규(기획재정부 과장)

박소영(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한승희(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김도일(한국재정정보원 연구원)

디자인·제작 더쥬커뮤니케이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재정전문 연구기관

재정의 통합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과 소통하는 재정운영 지원

통합·체계적 재정
· 정책통계분석

+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관리지원

- 재정통계분석 기법개발
- 재정통계분석 및 재정정보공개

- 각종 재정사업평가 및 관련연구
- 재정 정책 전반 연구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